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한국종합화학 부실의 책임은?

한국종합화학이 1963년 설립된 지 27년만인 2000년 11월30일 본격적인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공기업 민영화가 온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나온 비보 아닌 비보였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의 효율성을 놓고 정부와 관련 공기업 노조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판에 공기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한국종합화학을 민영화하는 것도 아니고 청산한다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한국종합화학은 11월30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정식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이 지분 중 99%를 소유하고 있어 11월30일 주총은 말이 주주총회이지 정부의 지시대로 청산절차를 밟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을 것이다. 해산결의 직후 직원 퇴직절차를 밟고 있으며, 2000년 12월말까지 생산원료를 모두 소진하게 돼 있어 공장은 12월중순부터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한국종합화학 노동조합이 11월17일부터 일부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폐수처리제나 합성세제로 이용되는 수산화알루미늄 출고를 중단시킨 상태라고 하니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폐업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아니 가동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만큼 노동조합의 파업이 적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2000년 수출이 1700만달러 이상으로 1999년보다 121% 늘어나는 등 영업상태가 좋아져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핑계이고 명예퇴직금을 더 타내기 위해 벌이는 몰염치한 파업이라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지만…

감독부처, 아니 한국종합화학을 망쳐놓은 장본인인 산업자원부가 한국종합화학을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국내기업과 진행중이어서 매각이 이뤄진다면 인수기업이 가동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두고볼 일이나 수천억원을 투자한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을 스크랩한다는 것은 4500만 국민의 가슴에 퍼런 멍자국을 남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한국종합화학은 국내 유일의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기업으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1998년말부터 민영화 절차가 진행됐으나 1999년3월 공개입찰에서 유찰된 이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일부 설비라도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역시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2000년초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청산절차 개시방침이 결정됐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종합화학의 지난 5년간의 누적적자가 1450억원에 이르고 향후 수익성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매각 내지 청산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종합화학이 정부의 대표적인 부실투자 공기업으로 꼽혀온 것도 누적적자가 커지고 있고,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1996년 이전까지는 매우 건실한 국영기업으로 평가받아왔던 한국종합화학이 대표적인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혀 설립 27년만에 본격적인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1994-97년의 수산화알루미늄 공장 건설과 한국신화 합작투자 때문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1995년 49.4%, 1996년 47.0%로 지극히 양호했던 한국종합화학이 1996년2월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을 완공한 후 부채비율이 1997년 142.7%, 1998년 266.3%로 악화된 것을 보면 수천억원을 투자한 수산화알루미늄 공장 건설이 부실요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물론 폐기물을 처리한답시고 설립한 남양화성, CFC 대체제를 생산한답시고 울산화학과 합작으로 설립한 한국신화도 부실을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했다.

1995년에 18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한국종합화학이 1996년 436억원, 1997년 566억원, 1998년에는 남해화학 매각대금 중 1000억원을 계상하고도 순이익이 423억원(사실상 577억원 적자)에 그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한국종합화학을 책임지고 있던 S사장과 산업자원부와 정부의 TK파가 마지막 발악의 일환으로 한국종합화학의 부실을 이끌었다는 설이 파다했고, 화학저널도 부실투자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었다.

DJ정부가 100조원이넘는공적자금을조성하면서 국민의지탄을받는것은공적자금사용처를정확히 밝히지않는것과함께부실경영에책임이있는경영주와부패한관계공무원을처벌하지않고유야무야넘어가기때문이다.

<화학저널 2000/12/4>